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8
----------	------

제출연월일 : 2017. 0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제4호)
-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2월 27일 ~ 3월 19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3년” 를 “5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최 정 호
	팀장 직위·성명	여성가족팀장 진 일 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노 연 (790-563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3. (현행과 같음)</p> <p><u>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u></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② (생략)</p> <p>③ 위탁운영기간은 <u>3년</u>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년</u> ----- ----- -----.</p>

【관계법령 발췌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